

시론



김영집

광주대 교수·지방시대위 전문위원

연초 광주시장·전남도지사가 폭발적인 선언을 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합의서를 발표했다. 그것도 5·18 국립묘지에서였다. 5·18 정신을 지키겠다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상징으로 보인다. 두 단체장은 지방선거는 물론 정치인으로서 명운을 건 선택을 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지키지 않으면 시장·도지사는 당장 낙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중대 결단을 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 합의는 높이 평가돼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행정통합이 합의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단일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일단 기득권을 버린 것이며, 또 통합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둘 다 후보로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결단이기 때문이다.

과거 준비가 어찌 되어 왔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결단은 매우 큰 지역 대전환의 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며 국민 의견은 어떠한가를 물었다. 이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 보이며

행정통합, 통합 상위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주민들의 합의 수준을 타진해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부 유력 광주시장·전남도지사 후보들은 광주·전남 시장·도지사의 선언은 선거용 정치적 술수이며, 졸속 추진될 수 있으니 지방선거 후 다음 자치단체장 임기인 2030년까지 체계적으로 시·도민의 합의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행정통합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위로부터의 선언으로 주민 합의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라는 의견이 양분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도지사 후보들도 대의를 놔두고 자기 자리만 찾겠다는 것이냐는 역풍이 불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다. 시민사회는 찬반의 다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찬반 의견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다. 세상일에는 때가 있고 때를 잘못 잡으면 대사를 그르친다는 것이 역사적 순리다. 과연 어느 때가 맞을까?

정부와 국회는 오는 2월 국회특별법 제정으로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전·충남이 선도적으로 호응했고, 광주·전남 통합선언도 여기에 자극 받은 것이다. 호응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세다. 추종보다는 선도가 프리미엄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광주·전남은 지난해 후반 광주·전남 광역특별자치단체연합을 추진해 행정안전부로 특별자치단체 승인이 난 상태다. 그

래서 시장·도지사는 광역특별자치단체연합과 행정통합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단계에 추진되는 두 과정이 양립될 수 있을까? 서로 힘을 얻으려면 각각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거기에 행정통합을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해 이번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 일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지방선거 전 통합단체장을 뽑지 못하면 다시 시장·도지사가 선출돼 그간 경험상 각각의 이기적 권한 행사로 말처럼 과연 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대 국민의 의사다.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행정통합의 주민참여 주민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단시간 내에 어떻게 답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시도의 통합추진기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무조건 최선의 답을 내 놓아야 한다. 리더십은 여기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필자는 광주·전남 통합론자이자, 이재명 정부의 5급 3급 지방시대전략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광주·전남 통합은 대전·충남과는 다르지만 광주·전남만의 해법이 있다고 믿는다. 정총설계(頂層設計·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통합상위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일단 화두만 던지며 시장·도지사의 의지와 통합추진기구의 협의를 지켜보고 의견과 대안을 내놓고자 한다.

기고



이달석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
경제학박사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하지만 다른 해법을 선택했다.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를 도입했고, 한국은 이를 벤치마킹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했다. 두 제도 모두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시행 연차와 운영 방식의 차이로 성과와 부작용은 뚜렷이 갈린다. 한국형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일본 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 고향납세의 핵심은 ‘시장 논리’의 적극적 도입이다. 라쿠텐·사토후루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쇼핑물과 같은 기부 경험을 제공했고, 소득에 따라 사실상 높은 공제 한도와 법인 참여가 가능한 ‘기업관 고향납

고향사랑기부제, 한일 양국의 다른 해법과 과제

세’까지 허용했다. 그 결과 기부 규모는 시행 첫해 81억엔에서 2023년 약 1조엔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컸다.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며 제도의 본질이 ‘기부’에서 ‘쇼핑’으로 변질됐고 고가 가전·상품권까지 등장했다. 고소득자 몰림, 인기 지자체로의 기부 집중, 대도시의 세수 유출 문제도 심화됐다. 결국 일본 정부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으로 규제하며 제도 정상화에 나섰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일본의 시행착오를 의식해 ‘통제와 관리’를 우선했다. 단일 공공 플랫폼 ‘고향사랑e음’ 운영, 답례품 비율 30% 제한, 개인 연간 한도 500만원(2025년부터 2천만원 상향 예정) 설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는 소액 기부 확산의 촉매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제한적 운영은 제도의 확장성을 제약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플랫폼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방돼 있으나 실제 기부 과정은 여전히 공공 플랫폼 ‘고향사랑e음’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의 접근성과 마케팅 역량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쇼핑 플랫폼에 익숙한 기부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경직된 사용자 환경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개별적 권유·독려 금지’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스토리텔링이 위축되어 있고 법인 기부가 허용되지 않는 점도 기부 규모 확대에 한계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참여를 끌어당기는 매력과 확장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남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전남은 2023년 143억원, 2024년 187억원을 모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모금 실적을 넘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향한 지방소멸 대응 효과를 가장 빠르게 현실화한 사례다. 답례품의 품질, 지역 사업의 명확성, 운영에 대한 신뢰가 기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의 고향납세가 비판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감한 유인으로 국민의 관심을 지역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피하되 그들의 도전 정신은 배워야 한다. 2025년 기부 한도 상향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국민을 잇는 실질적인 가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청렴한 사회 위한 공직자의 자세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시행했고, 공무원에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부정부패 없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많은 노력에 비해 부패지수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청렴도의 기준은 시대 및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과거에는 그저 뇌물만 받지 않으면 청렴한 공직자로 생각됐으나,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업무처리 과정과 민원 응대 과정 등에서 공정성 또한 투명해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다.

민원을 만족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민원을

감동시키는 정도로 청렴의 척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청렴과 친절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이 있으며 청렴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자 노력할 때, 친절한 공무원으로도 한층 성장할 수 있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진정한 청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청렴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실천하기 쉽고 효과적이며 국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청렴 향상을 위한 대책,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배려, 존중, 기본이라는 청렴의 밑바탕이 먼저가 아닐까? 청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문기선·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AI 시대 공공서비스 혁신에 나선 광주시 행정 주목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 AI의 안전·신뢰·책임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활용 기준을 제시하는 법정부 차원 법률이다.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행정혁신에 착수했다. 자치법규(조례) 제정, AI 추진 전담조직 구성, 전 직원 활용 환경 조성 등이 핵심으로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AI 시대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적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인프라 확산은 더딘 실정이다. 이에 반해 광주시는 업무 자동화 확대를 구내식당 식비 집계, 위원회 중보 위촉 여부 조회 등 2개 과제를 완료했다. 생성형 AI 기반 관외출장 여비 정산 시스템인 ‘AI 여비몬’도 선보였다. 아울러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한 오픈소스 자체 소형언어모델을 구축해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AI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초 총복 청주에서 생성형 AI, 딥러닝 등 최신 기술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

로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결선대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 자리에선 AI로 빠짐없이 혜택을 챙겨주는 ‘출생·육아 원스톱 시스템’과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지역맞춤 고립위험 예측 플랫폼’ 등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기상 3D 융합 AI 악취 예측 예보’, ‘고독사 방지 및 의료돌봄 행정의 혁신’ 등 우수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국적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AI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AI 정부 실현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공직사회 역시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광주시가 디지털 행정으로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단기 성과는 물론 중장기 로드맵도 차분히 실행돼야 한다. 데이터 보호와 신뢰성 확보 원칙 또한 지켜져야 한다. 시민들의 욕구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AI를 효율적으로 접목해 더 일 잘하는 광주시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인정한 전남형 만원주택 적극 확대의 필요성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서 진도(주거단지 속 청년의 희망)·고흥군(북합문화센터를 품은 아파트) 등 전남형 만원주택 7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실효적 복지 정책이다. 청년층의 욕구와 정부 정책 기조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전남도는 총 530호 규모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025년 하반기 진도군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비 2천157억원 중 국비와 융자가 포함되면서 도비 부담은 당초 계획의 약 45% 수준으로 줄었다. 향후 3년간 1천178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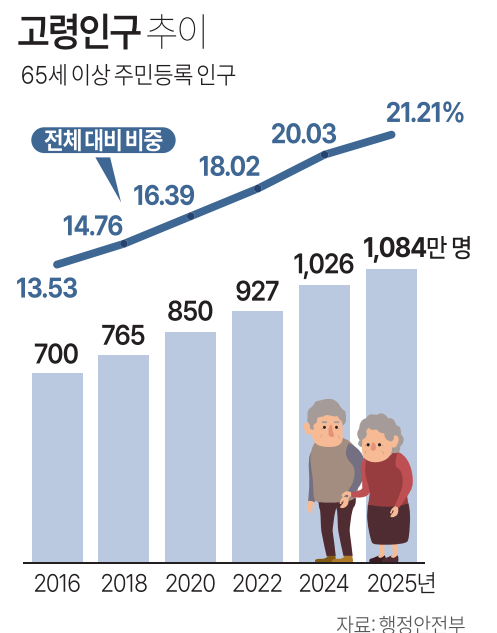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성공 정착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슬리퍼를 신고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 입지를 선정하고, 아이 양육을 고려해 33평형대 넓은 면적으로 확장하는 등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과도한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희망과 꿈을 키우는 튼튼한 보금자리 사업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출산을 상승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충분히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하다.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더 많이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적 정책이다. 전남도는 만원주택을 중심으로 주거·일 자리를 연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전남’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상 지역을 9개 군 최대 1천280호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만원주택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1.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천84만822명으로 전년(1천25만6천782명)보다 58만4천40명(5.69%) 증가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5천111만7천378명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은 21.21%다. 한국은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 성별 비중은 여성이 23.39%로 남성(19.00%)보다 4.39%포인트(p) 높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시·도는 전남(28.46%), 경북(27.46%), 강원(26.81%), 전북(26.61%), 부산(25.26%), 충남(23.43%), 경남(23.24%), 충북(23.05%), 대구(22.07%), 서울(20.43%), 제주(20.09%)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제주는 고령 인구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2개 시·군·구 가운데에서는 경북 의성군(49.20%), 대구 구원구(48.96%), 경남 합천군(47.39%), 전남 고흥군(47.25%), 경북 청도군(46.49%) 순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았다. 전체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곳은 170곳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